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6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20일 (음력 9월 1일) 금요일

옛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지 발굴 준비 착수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들의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5·18기념재단이 본격적인 발굴 작업 준비에 들어갔다. 발굴 작업은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관련 현장 조사를 지난 18일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발굴 장소를 특정한 만큼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발굴작업 이달 내 이뤄 질 듯...조사방법·일정 등 논의 법무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첨단 장비 동원 제의

광주교도소 안팎 2곳으로 추정됐던 암매장 장소는 현장 조사 결과,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가 '중장'으로 확인됐다.

비로 땅을 파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지목한 곳과 3공수여단 부대원이 남긴 약도에 표시된 암매장 추정 장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재단은 이날부터 구체적인 발굴 조사 방법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암매장 발굴 장소는 5·18 당시 교도소 내 농장으로 사용된 땅이다. 현재 아스팔트로 덮여 있고 울타리가 세워져 있다. 인근에는 과거에 없던 테니스장과 교도경비대가 사용하는 건물이 새로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암매장 추정 장소가 넓지 않은 만큼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발굴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늦어도 이달 내 발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현장 조사에 참여한 조현종 전 국립광주박물관장이 구체적인 발굴 방법과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재단은 발굴 과정에서 땅속에 묻혀 있는 유해를 감지할 수 있는 첨단 탐색장비를 동원할 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 광주교도소 땅을 소유하고 있는 법무부 측은 기념재단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첨단 장비를 동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상임·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조 전 관장은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발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탐색 장비를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국방부가 5·18과 암매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인력 지원 요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 필요하다면 최첨단 장비를 지원받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구체적인 발굴 방식과 계획을 확정된 뒤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 상임이사는 "법무부로부터 시설물 관리 대장을 받아 80년 5월 이후 교도소 지형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검토해 발굴 작업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달 내 발굴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규 기자



함평 국향대전에 소풍나온 유치원생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막을 하루 앞둔 19일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소풍을 나온 유치원생들이 국화를 감상하고 있다.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국화향기 가득한 함평으로'를 주제로 20일부터 11월5일까지 열린다.

광주시, '노동자이사제' 도입...서울 이어 두번째

시의회 상임위, 관련 조례안 원안 의결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노동자이사제(근로자 이사제)가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도입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 26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김용집(더불어민주당·비례)·김보현(더불어민주당·서구2)·문태환(국민의당·광산2) 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동자 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도시공사와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비엔날레,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등 시 산하 공사·공단·출연 기관에 근로자 대표격인 노동자이사를 뒀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자이사를 포함,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장 또는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는 무보수 비상임 이사인 노동자이사는 1년 이상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 노동자가 30명 이상인 공사 등은 2명, 300명 미만인 곳은 1명 이상을 정수로 하고 있다.

또 기관장은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자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노동자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교통공사에 산하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동자이사 2명을 임명했고 경기 성남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광주에서는 5·18 기념재단이 노동자이사 성격의 '직원대표 이사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은홍 기자



국제 망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 국제사회에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할 것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 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다뤄고 차가운 감방에서 자해고 있으며, 계속 불이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화귀한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의 만성적 인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초안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는 계속 나빠 지만 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적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바타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겼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접이식 매트리스가 제공됐다고 반박했다.

조인호 기자·자료 사진=뉴시스



이명박



박근혜



시민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